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효성 의문... “문제는 구멍뚫린 제도”

라임·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사태 제도적 허점서 비롯 ‘실효성 없어’ 금융당국의 TF구성·점검 실시에 판매·수탁사의 권한 강화 등 지적



예컨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경우 무역 금융펀드에 대해 부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투자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또 라임자산운용은 수탁회사인 신한금융투자와의 협의해 매월 펀드 기준가격을 0.45% 상승하는 등 임의조정했다. 운용사·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모여 자체 점검 하는 방식으로는 일말의 자율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권한 강화 필요

이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

회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펀드는 운용사가 운용지시를 내리면 수탁사가 자산을 매매하고, 운용사가 이 같은 내역을 사무관리회사에 알리면 펀드기준과 수익률 산정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운용사가 알아서 수탁사, 사무관리사에 각각 용역을 주고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에선 운용사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고,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는 부실채권 매입을 지시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예탁결제원이 발급한 펀드명세서를 통해 자산을 확인한 뒤 매매했기 때문에 부실채권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고,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 감시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탁결제원도 사무관리회사 규정상 운용사의 요청대로 종목정보만을 수동적으로 입력했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296조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의 업무는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것에 제한돼 있다. 결국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모두 운용사를 감시할 의무가 없어 책임여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완화했으면 감시감독 권한도 높아야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감시·감독권한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제도를 완화한 만큼 금융감독원에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사모펀드에 금융권이 개입할 경우 발전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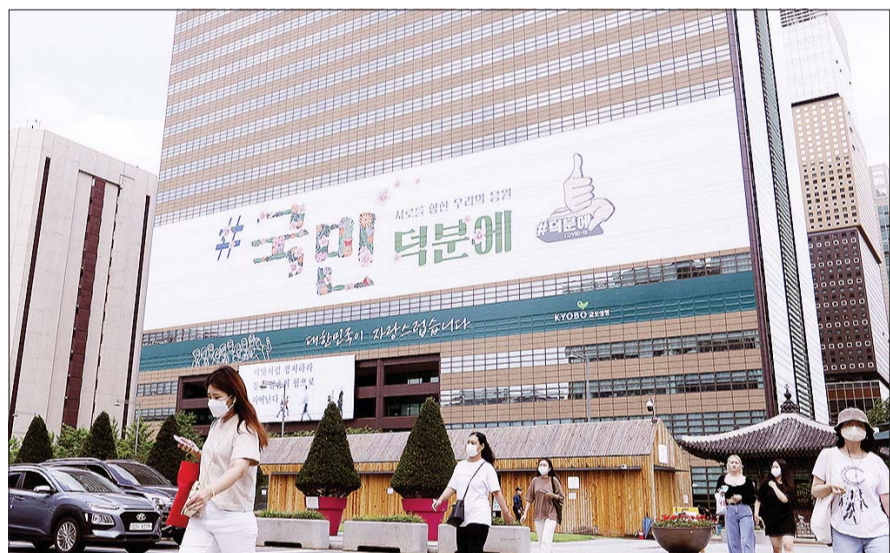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법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하는데 현재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누구인지조차도 들여다 볼 수 없게 돼 있는 등 기본적인 감시 감독권한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 옵티머스 등 지금까지 발생한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제도적인 허점에서 비롯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운용사·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는 자체 전수 점검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달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기준 사모펀드 수는 1만245개다. TF를 통해 사무관리회사의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수탁회사의 실제보관자산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교차 점검해나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점검방식으로는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없다는 것.



교보빌딩 새글 '#국민덕분에' 6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국민 응원 메시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응원 #국민 덕분에'를 담은 초대형 래핑(Wrapping)이 설치되었다. /손진영 기자 son@

산은 빠진 키코 은행협의체 이번주 가동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10곳 참여 산은 “자율조정 통한 배상 어려움”

외환과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룬 은행협의체가 이번주 가동된다. 협의체에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판매은행 11곳 중 10곳이 은행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참여를 마지막까지 고집했던 기업은행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 대구은행 등 10곳으로 협의체가 꾸려졌다.

다만 산업은행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산은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성하



KDB산업은행 전경.

이스코에 28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참여 거부 역시 키코 불안전판매 등과 관련해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외부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의견을 받아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라임사태의 경우 선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키코의 경우에 강제력이 없는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10개은행은 이번주 협의체를 가동하고, 운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계약을 맺은 기업 중 과거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한 145개 기업이 해당한다.

기본손해배상 비율은 30%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과생상품 거래를 많이 했으면 배상비율이 낮아지고 ▲주거래은행과 키코 거래를 했거나 ▲만기를 장기로 설정한 경우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오픈뱅킹, 2금융권까지 확대해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오픈뱅킹의 목표는 경쟁과 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의 극대화이며, 다양한 금융기관 참여를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의 발전 방향으로 ‘확장성’을 언급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제3자 기관에 표준화된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금융 결제 인프라다. 현재는 은행을 중심으로 타행 조회 및 이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면시행 후 출시 6개월 동안 가입자 4000만명, API 월간 이용 건수 1억 9000만건을 기록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은행, 핀테크 기존 참여자에 더해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금융 플랫폼의 기반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이끌어낼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의 발전 키워드로 ‘확장성’과 더불어 ‘신뢰’, ‘개방’, ‘안정’을 제시했다.

금융산업에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를 요구했다. 은행, 핀테크, 빅테크 등 오픈뱅킹 참여자들에게 금융보안,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여기에 ‘개방’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은 금융 결제 분야에서 필수 설비기 때문에 개방성이 중요하다”며 “수수료, 데이터 상호 접근성 측면에서 오픈뱅킹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오픈뱅킹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당국 차원에서 자금 이동의 모니터링을 통해 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해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영석 기자 ysl@

중기벤처부, 3차추경 3.6조... 비대면 창업 등 지원

아이디어 가진 청년 멘토·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3조6114억원을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스타트업 글로벌화, 전통시장 디지털화 등에 사용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은 심사 과정에서 최근 성장세가 눈에 띄는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한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20억원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 63억원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20억원 등이다.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독려하고,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청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는 멘토링과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은 사업 계획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체화된 청년 예비창업자가 창업교육, 창업바우처, 경영컨설팅 등을 1억원 한도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청년 창업 기업에 세무·회계·기술보호 비용을 100

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2000개사를 지원하게 됐다.

중기부는 이밖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8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 680억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 7억6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은 다른 소상공인보다 나이가 높아 상대적으로 온라인 진출이 어려웠다”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없애고자 전국 38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 온라인 판로 개척과 성공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